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8
----------	------

발의연월일 : 2020. 7. 24.

발 의 자 : 태영호 · 홍준표 · 이종배  
송언석 · 정희용 · 김용판  
金炳旭 · 이명수 · 박성민  
김정재 · 서범수 · 임이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강제북송의 위법성과 반인권성을 규탄한 바 있음. 이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명

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2, 제4조의2, 제7조, 제26조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강제송환의 금지) 북한이탈주민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제3조의3(송환 결정 등) ① 북한이탈주민의 송환을 결정할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송환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중 “국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를 각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보호신청 등)”을 “(보호신청과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임시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5항) 중 “내용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을 “내용과 방법, 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8항에 따른 합동심문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전담할 북한이탈주민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⑥ 조사관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호신청자에게 제7조의2에 따른 보호신청자의 권리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⑦ 조사관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기관에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이나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 후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심문을 실시한다.

⑨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 또는 합동심문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⑩ 국가정보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호신청자의 권리) ① 보호신청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원하는 보호신청자를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해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보호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신청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④ 보호신청자는 조사관의 조사 과정 및 관계기관의 합동심문에 대한 녹음 또는 녹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관 및 관계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7조의3(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보호신청자의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국제기구나 보호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보호신청자 면담

2. 제8조의 보호결정 여부에 관한 의견 제시

제15조제2항 중 “통일부장관”을 “통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통일부장관”을 “통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를 “지역적응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부장관”을 “통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에게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청하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국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를 신청한 경우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u>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u> 을 말한다. <u>&lt;신 설&gt;</u>          <u>&lt;신 설&gt;</u>          2. ~ 4. (생략) <u>&lt;신 설&gt;</u>	제2조(정의) ----- -----. 1. ----- <u>다</u> <u>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u>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u> <u>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u> 2. ~ 4. (현행과 같음) <u>제3조의2(강제송환의 금지) 북한이탈주민은 「시민적 및 정치</u>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제3조의3(송환 결정 등) ① 북한 이탈주민의 송환을 결정할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송환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제4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

사람

3.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

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신청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 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  
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  
-----.

제7조(보호신청과 조사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임시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전담할 북한이탈  
주민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⑥ 조사관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호신청자에게 제7조의2  
에 따른 보호신청자의 권리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⑦ 조사관은 보호신청자에 대  
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기관에 문  
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 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이나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 후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심문을 실시한다.

⑨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 또는 합동심문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⑩ 국가정보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  
-----내용과 방법, 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8항에 따른 합동심문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의2(보호신청자의 권리) ① 보호신청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신 설>

행사하기 원하는 보호신청자를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해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보호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신청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④ 보호신청자는 조사관의 조사 과정 및 관계기관의 합동심문에 대한 녹음 또는 녹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관 및 관계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7조의3(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보호신청자의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국제기구나 보호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기구가 다음 각 호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생  
략)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  
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  
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정보제공·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

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 1. 보호신청자 면담

## 2. 제8조의 보호결정 여부에 관 한 의견 제시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  
-----  
-----  
-----  
-----

-지역적응센터-----  
-----.

② 통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생 략)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  
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  
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  
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  
항 및 「주거급여법」 제5조에

체의 장-----  
-----  
-----.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생활보호) ① -----  
-----  
-----  
-----  
-----  
-----  
-----  
-----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청하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p> <p>1. ~ 7.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29조(비용 부담) ① 이 법에 따 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u>국가</u>가 부담한다.</p> <p>② (생 략)</p>	<p>----- ----- -----.</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보호 기간이 만료되 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생활보호 기간 연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u></p> <p>제29조(비용 부담) ① ----- -----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u>----- -----.</p> <p>② (현행과 같음)</p>
--	---